



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현황 및 시사점

IE Business School, IE University

정 태 진

2023. 06. 13.

목차

01

배경

02

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 현황

03


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

04

시사점



I. 배 경

 조선일보

[7NEWS] 어느 날부터 '횡령 공화국'이 된 한국 - 조선일보

[7NEWS] 어느 날부터 '횡령 공화국'이 된 한국 ... 안녕하세요. 7NEWS입니다. 올초 오스
템임플란트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국내 증시에서 횡령 사건...

2022. 3. 24.

朝鮮日報

- 新외부감사법 시행과 함께 강도 높은 회계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횡령 사건 발생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제도 전반의 실효성 논란 촉발
 - › (업종불문의 광범위한 횡령) `22.1. 오스템임플란트의 2,215억원 횡령 사태 발생 이후 비교적 강력한 내부 통제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기관,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조차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
 - (비금융업) 오스템임플란트, 계양전기, 아모레퍼시픽, 클리오, 롯데GRS 등
 - (금융업) 우리은행, KB저축은행, 새마을금고, 신한은행, 농협 등
 - (관공서) 강동구청, 횡성군청 등
 - › (非재무 부서 직원의 연루) 구매 · 영업 부서 등 다양한 운영 조직의 직원이 횡령에 가담
 - › (문서 위조의 동반)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, 거래처 장부금액 조작, 위조 공문 발송 등

Q 아시아경제

'횡령·배임' 온상 헬스피·헬스닥, 상폐 몸살...이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

현재 횡령·배임죄에 대한 기본 형량 기준은 5~8년에 불과해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, 주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 기준을 재검토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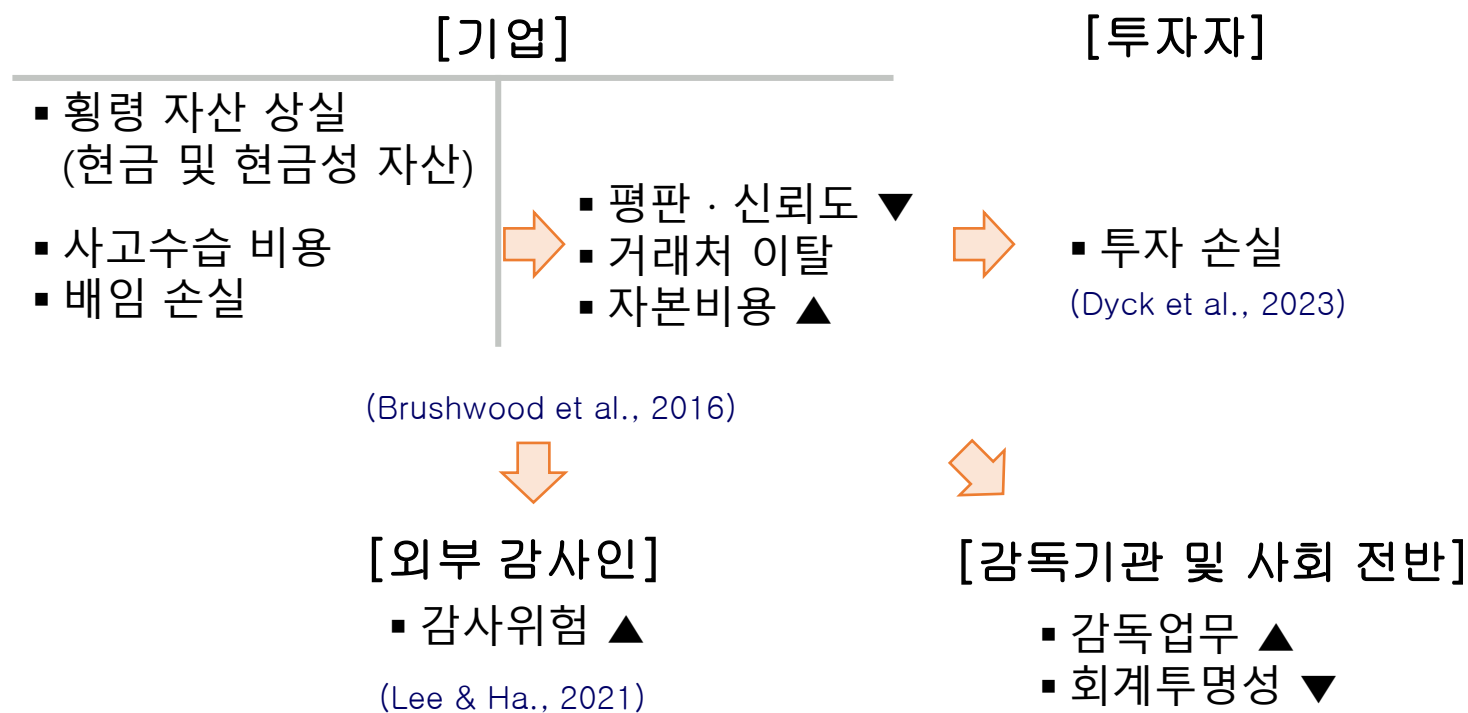
2022. 2. 17.



- 횡령·배임과 같은 내부통제의 무력화는 자산 상실을 비롯한 직접적 손실 뿐 아니라 회계투명성 저하로 자본시장 전반의 막대한 간접 손실을 초래

›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만성적 가치할인과의 연관

- Korea Discount 현상의 거버넌스 요인 설명력: 14% (김준석, 2022)



■ 오스템임플란트

- › (횡령금액 및 사용처) 2,215억, 주식 · 부동산 · 금괴 등 투자
- › (주요 문제점) 담당 직원이 자금 집행, 승인 및 기록 전반에 관여, 잔고증명서 위조 등
- › (적발 정황) 주식투자 손실로 결산 전 재입금 실패

■ 계양전기

- › (횡령금액 및 사용처) 245억, 가상화폐 투자
- › (주요 문제점) 거래처 지급 대금 대리 수령, 매출채권 장부 조작 등
- › (적발 정황) 외부감사인의 채권채무조회서 조회 과정

■ 우리은행

- › (횡령금액 및 사용처) 697억, 파생상품 투자
- › (주요 문제점) 순환보직 미실시, 실물 계좌 미확인 등
- › (적발 정황) 내부감사인이 배상금액 반환을 위해 장부상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

▪ `19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‘감사’로 상향

› 외부감사인의 검증대상 확대

- (검토) 경영진이 자체 점검 · 작성한 운영실태보고 문서
- (감사) 경영활동 전반(예: 구매 · 생산 · 매출 등)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설계와 운영

› 외부감사인의 검증절차 고도화

- (검토)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
- (감사) 주요 통제활동의 직접 관찰 및 재수행

<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순차적 의무화 일정>

자산 규모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2조원 이상	검토	감사의무화									
		계도 위주 감리			본격 감리						
5천억원~2조원	검토	감사의무화									
		계도 위주 감리			본격 감리						
1천억원~5천억원	검토				감사의무화						
					계도 위주 감리			본격 감리			
1천억원 미만	검토										
	(2022년 12월 개정안으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면제)										

주 : 개별 · 별도 재무제표 기준 시행 일정
 자료: 금융위원회, 2022. 12. 5

- 제도개혁 이후에도 대규모 횡령·배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촉발 (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, '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', 2023.2.10)
 - › (기업 측) 비용 및 업무 부담 증가에 비해 제도의 효익이나 실효성에 의문
 - 과도한 구축 비용 및 형식적 문서화 절차로 업무 부담만 가중
 - › (감사인 측) 제도 개선 후 전체 감사투입 시간 37% 증가
 -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따라 횡령·배임 사건 발생 빈도 감소 추세
 - › (학계 측) 감사품질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 효과
 -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 (김태중 등, 2021)
 - 내부회계 담당인력 수준에 따라 개선 효과 존재 (구본승·안성희, 2021)



아시아경제 PICK | 6면 1단 | 2023.04.14. | 네이버뉴스

[빛바랜 회계개혁]④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로도 횡령 못막아

한국회계학회의 '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'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 강화와 횡령 발생 여부는 '유의미한 결과가 없음'이 일관되게 나...



II. 주요국의 내부통제제도 현황

- 미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를 목표로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‘감사’로 유지
 - ›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경영진의 평가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의 2단계로 이루어짐
 - 경영진의 평가보고서 (SOX 404(a)) /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(SOX 404(b))
 - ›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행부담 완화 방안
 - 시가총액 혹은 매출액 기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행비용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절차를 면제하고 있음

<美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 적용 대상 기업>

		매출액 \$100 million	
		미만	이상
2020. 3. 개정 이후	\$75 million 미만	면제	면제
	\$75 million 이상 \$250 million 미만	면제	감사
	\$250 million 이상 \$700 million 미만	면제	감사
	\$700 million 이상	감사	감사

자료: SEC, Release No. 34-88365, 2020. 3. 12

- ‘당기 감사과정에서의 재무제표 수정’과 ‘회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’ 등이 주요 사유이며, ‘자금 통제 미비’는 1건에 불과 ([삼성KPMG, 2022](#))
 - ›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(22.8%)
 -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 핵심감사사항이나 회계추정 등에서의 오류 발견
 - ›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(19.1%)
 - 결산 업무 및 절차와 관련한 취약점, 회계처리 검토 절차 미흡이나 회계 부서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미흡 등
 - › 정보통신기술(IT) 통제 미흡 (16.3%)
 - 최고경영진이 정보통신기술 관련 ‘중요한 취약점’을 인식하였으나,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등
 - › 부적절한 공시 통제 (9.5%)
 - 회사의 공시 통제 및 절차가 보고목적 내부통제와 관련해 법적 공시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

- 선행연구는 크게 ‘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’, ‘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의 추후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’, ‘소규모기업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’로 나누어볼 수 있음
 - ›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의 특성
 - 소유구조 (Bardhan et al., 2015); 감사위원회의 특성 (Krishnan & Visvanathan 2007); 감사인 (Ashbaugh-Skaife et al., 2007); 경영진 보상 (Hoitashi et al., 2012); 종업원 정책 (Guo et al., 2016) 등
 - ›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의 추후 의사결정
 - 미래 횡령사건의 발생 (Donelson et al., 2017); 재무보고품질 (Doyle et al., 2007); 재무제표재작성 (Myllymaki 2014);
 - 실물투자의 효율성 (Cheng et al., 2013); 자본조달비용 상승 (El-Mahdy & Park, 2014; Gao & Jia, 2017) 등
 - › 소규모기업 대상 감사면제의 효과
 - 이행비용에 따른 상장폐지 (Cutler 2006); 감사로 인한 감사수수료 상승 (Eldridge & Kealey, 2005); 과도한 이행비용으로 인한 부정적 초과수익률 (Chhaochharia & Grinstein, 2007) 등

-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발생한 대규모 회계부정 사태로 내부통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
(이효섭 등, 2022)
 - › 1995년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직원이 은행 소유의 자산을 횡령하여 11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
 - › 1996년 일본 스미모토 상사의 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년에 걸쳐 26억 달러를 횡령
 - › 2005년과 2006년 가네보(Kanebo)과 라이브도어(Livedoor)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
- 일본은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마련
 - ›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을 의무화함
 - 다만 외부감사인의 직접 감사가 아닌 회사가 제시한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증명을 첨부하는 간접적 형태에 해당
 -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통제보고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의견을 제시
 - › 상장 후 3년간 소규모회사에 대한 내부통제보고서 감사를 면제

- 선행연구는 크게 ‘내부통제제도 평가의 도입 등에 대한 선행연구’와 ‘자본시장 반응’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해볼 수 있음
 - › 내부통제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
 - 재무보고품질 악화 (Nakashima & Ziebart, 2015); 보수주의 회계처리 경향 심화 (Eddie & Yamaguchi, 2022); 감사보수 상승 (Uemura 2016); 등
 - › 자본시장 반응은 일관되지 않음
 - 유의미한 주가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(Yazawa 2010; Kawanish & Takeda, 2011); 부정적 초과수익률 (Nishizaki et al., 2014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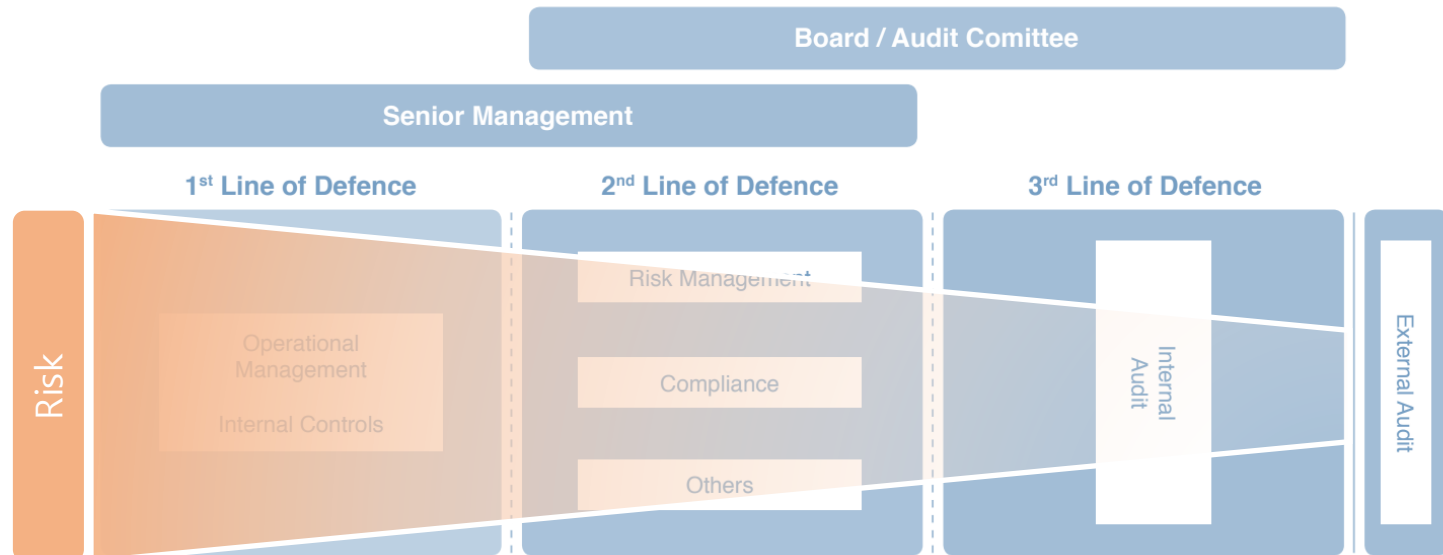
III.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

- (내부통제제도) 회사의 3가지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
 - › (운영 Operations) 업무수행에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
 - › (보고 Reporting) 신뢰성 높은 내·외부 보고를 위한 비재무·재무 정보의 작성
 - › (법규준수 Compliances) 기업활동이 관련 법규 및 감독 규정을 준수

- (내부회계관리제도) 내부통제제도의 보고 목적 중 외부 공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·운영하는 정책 및 절차
 - › 자산의 보호와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

-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 의무는 **형식적 설계 + 실질적 통제와 운영**을 포괄
 - › 모든 오류 ·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외부감사의 고유 한계를 보완하고자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재무보고 과정 전반의 엄정한 관리를 요구
 -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으로 잘 통제된 환경에서는 위반 행위자의 동기가 고의이든 과실이든 합리적 수준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

<3선 방어체계>



- ('01.8.) '97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5년간 한시적 시행
 - 기업구조조정촉진법 4조
- ('03.12.) '02 미국의 SOX법을 참고하여 외부감사법상 영구적 법제화
 - 舊 외감법 2조의 2 - 회사 및 경영자의 운영책임
 - 舊 외감법 2조의 3 - 감사인의 검토책임
- ('05.6.)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감사인 검토기준 제정
 - '92 COSO Framework 및 PCAOB AS No.2 중심
 - 한국상장사협의회 산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설치 · 운영
- ('18.7.) 新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정
 - '17 COSO Framework 반영
- ('18.11.) 新외감법 시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

- 경영진이 자체 점검 · 작성한 운영실태보고서를 ‘검토’하는 것의 절차상 한계

→ 실질적인 내부통제 위험을 확인 · 평가하기 위해 ‘감사’ 수준의 인증제도 필요

- ›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일지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단계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한 **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어려움** (신현걸, 2007)
- › 감사인이 취약점을 발견하여 관련 검토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
경영진이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아 차기 횡령 발생 빈도가 높게 관측 (이성욱 등, 2010)
- › ‘검토’상 중요한 취약점 소멸 이후에도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은 상당기간 미해소 (이세철 · 고영우, 2020)
- › 전반적인 재무보고품질 개선효과 역시 불확실하거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관측
(최종서 · 공경태, 2012; 최준혁 · 허익구, 2016)

-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체계는 3단계로 구성
 - › (1단계)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
 - 회사의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
 - › (2단계)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
 -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없는지 확인
 -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및 운영실태 보고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주주총회 1주 전 이사회에 대면보고
 - › (3단계)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
 -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직접적 검증의 방식으로 인증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함

-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기업의 비중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(삼정KPMG, 2022)
 - › 200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한 검토의견 표명 도입 후 비적정의견의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
 - 2005년 3.6%였던 비적정의견 기업의 비중은 2014년 기준 0.9%까지 낮아짐
 - ›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 도입 이후에도 감사의견상 비적정기업은 낮은 추세
 - 감사의견상 비적정 기업은 2.5%로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도입 첫해(2004년)의 16.2%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됨
 - 2020년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감사대상이 확대되었지만 비적정의견 기업의 비중은 1.4%로 감소함

-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부실로 인한 ‘범위제한’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한 통제 미비 등으로 인한 ‘자금통제미비’ 사례가 많음 (삼정KPMG, 2022)
 - ›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(26.8%)
 -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 핵심감사사항이나 회계추정 등에서의 오류 발견
 - › 범위 제한 (18.3%)
 - 외부감사법이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이나 평가보고서 미제출, 감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이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게 제공되는 경우
 - ›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(14.4%)
 - 결산 업무 및 절차와 관련한 취약점을 포함하여 회계처리 검토 절차 미흡이나 회계부서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미흡 등으로 인한 취약점을 의미함
 - › 자금 통제 미비 (12.4%)
 - 자금 대어나 지급 거래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정성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비경상적이고 이례적인 자금거래가 집행되는 과정에 이사회 등의 승인절차 없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함

IV. 시사점

-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며, 형식적 이행 요건 측면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충실한 체계로 평가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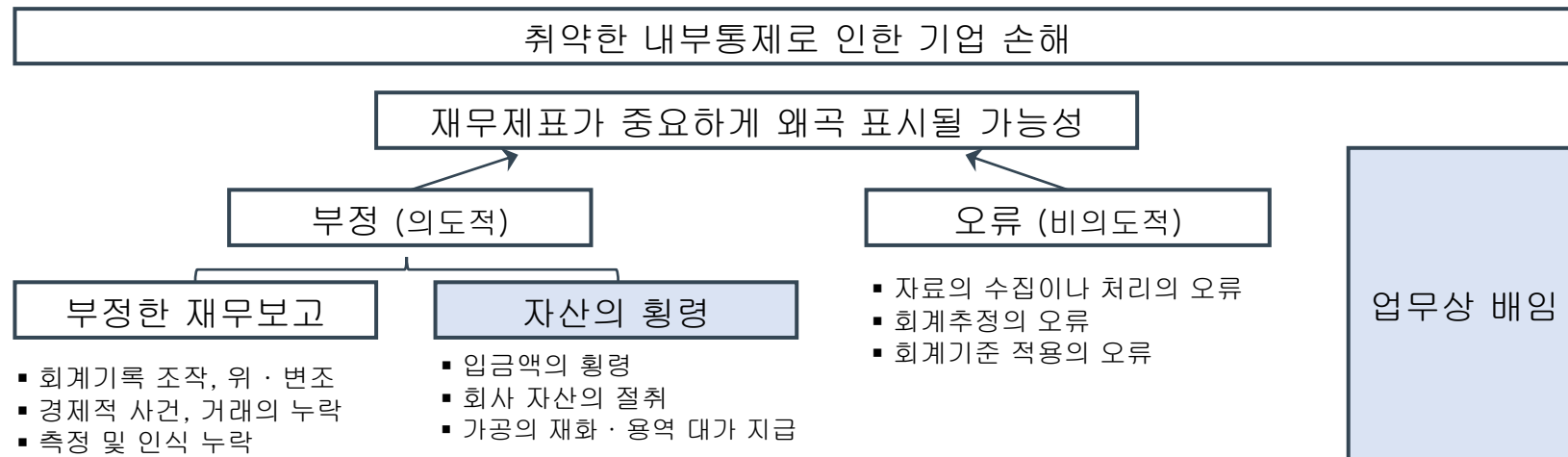
단계	평가 및 감사체계	한국	미국	일본
1단계	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 실태 평가	○	○	○
2단계	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	○	X	X
3단계	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	○	○	△ (간접)

-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의 사유 중 ‘자금통제미비’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·배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

-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 이후 관련 국내 · 외 선행연구는 주로 재무제표 감사품질의 개선 효과 검증에 치중하고 있으며, 이마저도 혼재된 결과를 보고
(Nagy, 2010; Bhaskar et al., 2019; 김태중 등, 2021; 구본승 · 안성희, 2021)

- 혼재된 결과의 주요 원인
 - › (내적 타당도 측면)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재무제표 감사와 서로 다른 유형의 감사이므로 재무제표 감사품질 개선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(Bhaskar et al., 2019)
 - › (외적 타당도 측면) 재무제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활용하는 재량적 발생액은 현금흐름과 순이익의 비정상적인 괴리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측정오차 문제를 내포

-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(예: 구매 · 생산 · 매출 활동 등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설계 및 실효적 운영 여부를 검증하게 되면,
 - 기업 경영진은 감사 수검을 위해 내부통제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음
 - › 횡령 · 배임 사건은 연관된 통제 활동의 부재 혹은 통제의 무력화와 함께 발생하므로, 고도화된 내부통제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 (김영태, 1995; 배한수 · 권성국, 2015)
 - ›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운영 기업일수록 내부자의 권한을 잘 통제하여 경영진의 특권적 소비행태를 억제(예: 업무연관성이 낮은 접대비의 과다지출 방지) (최성호 · 김문태, 2017)



감사합니다